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박 홍 서
현대중국학회

◆ 논문 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동인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미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 속에서 중미 양국이 상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대한반도 전략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도전국 중국이 기존의 대북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유인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지배국 미국은 동일한 논리에서 한미동맹을 견지하고 중국의 혈맹국인 북한을 유인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본 논문은 '동맹전이' 이론을 도입한다. 동맹전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분쟁 가능성은 지배국 동맹세력과 도전국 동맹세력 간의

세력전이 발생 시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로부터 지배국과 도전국 모두 자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 동맹관계의 균열 및 상대 동맹국들 중 일부를 유인하려 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탈냉전기 1) 미일·한미 동맹의 변화발전과 그에 맞선 중러·중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2)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한국 접근과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중미 상호간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상황진개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중국의 부상, 중미관계, 한반도, 남북한, 동맹전이이론

일본은 귀국(貴國)에 대하여 티끌만한 원한도 없다. 단지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뿐이다 ...(중략)... 일본의 당이 되어 상의하여 대명(大明)을 침범하는 것이 어땠겠는가?

풍신행장(豊臣行長)¹⁾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3-B00006).

줄고에 귀중한 논평을 주신 모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1) 宣祖實錄 25년 7월 戊午條: 「日本於貴國無纖芥之恨. 只要犯中國者也... (중략)... 庶幾枉黨于日本相議犯大明乎?」

I. 서론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은 국제정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3,546억 달러에서 2조 2,289억 달러로 증가해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증가율인 204%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그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90년 세계 11위에서 2005년 현재 4위로 성장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08). 특히, 구매력 환산 중국의 GDP는 2006년 현재 미국(13조 6백억 달러)에 이어 10조 2천억 달러로 이미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방비 역시 1882억 달러로 미국(5287억 달러)에 이은 2위로 추산되고 있다(CIA 2007; SIPRI 2007).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탈냉전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산출되고 있다(Johnston 2003, 5-56; Friedberg 2005, 7-45; Christensen 2006, 81-126).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미관계의 변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외 정책상 '핵심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Kim 2006a, 43; 박홍서 2006, 107; 溫憲 2007), 미국 역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적대세력의 팽창 저지를 탈냉전기 핵심적 대외목표로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01, 2; Department of Defense 2006, 27-32). 따라서, 중미 양국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형태이든 협력 혹은 갈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다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인해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1999년 이후 새롭게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한중 혹은 북중간의 양자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 발전과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 및 2007년 2.13 합의 이후 급반전 하고 있는 북미관계 역시 단순한 양자관계 차원에서 운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가 단순히 해체된 결과인가? 아니면, 중미간 장기적인 상호전략의 차원에서 의도된 것인가? 후자라면, 그 구체적인 동인과 전개과정은 어떠한가?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동인 및 과정을 '동맹전이(alliance transition)'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중미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 속에서 중미 양국이 상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대한반도 전략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기존의 대북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유인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미국은 동일한 논리에서 한미동맹을 견지하고 중국의 '혈맹국'인 북한을 유인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동맹전이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구체적 행태를 분석할 것이다.

Ⅱ.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변화: 동맹전이 이론의 시각

과학이론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하나인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은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중미관계 변화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²⁾ 즉, 세력전이 이론이 지배국가(dominant state)와 도전국가(challenger) 사이의 세력전이와 양자간 전쟁가능성에 관한 이론이라면, 탈냉전기 미중관계는 그 적절한 개별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정치적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는 두가지 핵심적 설명변인은 1) 국가간 상대적 힘의 변화와 2) 국가들의 국제질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인 국가간 세력전이는 지배국과 도전국간의 분쟁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이며 후자인 국가간 만족도는 그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세력전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호간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만 양국간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상호 만족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물질적 세력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배국과 도전국간의 전쟁가능성은 높지 않다(DiCicco and Levy 2003, 115-116).³⁾

한편, 세력전이 이론에 기반해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이론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간 세력전이 현상을 국내적 산업발전을 통해 달성된다고 가정하면서 대외적 동맹변인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력전이 이론을 정초한 오르겐스키(A.F.K. Organski)에 따르면,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해 근대 이전시기와 같이 동맹관계를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간 세력전이 현상은 대외적 동맹관계의 변화가 아닌 국내적 산업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Organski 1958; Organski and Kugler 1980; DiCicco and Levy 2003, 118-119).

이러한 맥락에서, 김우상이 제시한 동맹전이 이론은 동맹변인을 국가간 세력전이의 핵심적 변

2) 과학철학계에서는 과학이론을 1) 단순한 설명 도구에 불과하며, 따라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구주의적 시각(instrumentalism)’ 과 2) 이론자체가 진리 값을 갖고 있다는 ‘실재론적 시각(realism)’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인 포퍼의 의견을 따른다. 그에 따르면, 이론은 가설적 성격의 도구라 할 수 있으나, ‘반증(falsification)’ 되기 전까지 잠정적인 실재로 간주된다(Popper 1961, 111).

3) 결국, 세력전이 이론이 가정하는 ‘만족도’는 구성주의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세력관계와 연관된 ‘전략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힘의 배분(구조변인)과 인식(단위변인)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세력전이 이론은 구조변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월츠(Waltz 1979)의 신현실주의 이론과 대비되며, 반면 스웰러(Schweller 2006) 등이 주도하고 있는 ‘신고전 현실주의(neo classical realism)’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변인과 단위변인이 결합된 이론은 ‘설명력’ 확보의 대가로 ‘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상존한다(Waltz 1979, 88-99).

인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Kim 1992, 153-172; 김우상 2007, 223-260). 동맹전이 이론은 기존 세력전이 이론의 기본가정들을 수용하면서도, 국제정치의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배국가와 도전국가라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동맹관계를 포함하는 '지배국가군'과 '도전국가군' 사이의 세력전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배국가와 도전국가의 전쟁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는 도전국가와 그 동맹국가들의 전체 힘이 지배국가와 그 동맹국들의 힘과 비슷해질 때인 것이다.⁴⁾

한편, 이러한 동맹전이 이론의 전제가 참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배국과 도전국간의 세력전이 상황속에서 동맹변인이 중요하다면, 양국 모두 상호 전략이란 측면에서 자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 혹은 강화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동일한 논리로 지배국과 도전국 모두 상대방의 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기를 희망할 것이란 추론 역시 가능하다. 셋째, 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동맹국을 '유인'할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동맹전이 이론이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과 같이 국가들의 '만족도'를 주요한 설명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상대방 동맹국에 대한 유인전략 역시 만족도 수준에 따라 그 구체적 양태가 결정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즉, 현 국제 질서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상대방 동맹세력의 균열 혹은 유인에 대한 효용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역관계 역시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 양국의 동맹전략은 상술한 동맹전이 이론의 추론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중 양국이 탈냉전기 지배국가와 (잠재적) 도전국가의 위치에 있다면, 상호전략적 이유에서 1) 자국의 기존 동맹 강화, 2) 상대국 동맹관계의 균열 선호, 그리고 3) 상대국의 동맹국 유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중동맹 및 한미동맹의 변화 발전, 그리고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 및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발전 가능성 등은 동맹전이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중국의 '화평굴기' 개념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이론적 화답인 '이익상관자(stake holder)' 개념은 현 국제질서 속에서 중미 상호간 만족도가 낮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상술한 상황전개의 제약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4) 20세기의 대표적 합리주의 과학철학자 라카토스(Lakatos 1970)에 따르면, 이론의 진보는 단일이론들의 단순한 반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가정(hard core)을 공유하는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 일종의 동류이론군) 안에서 보조가설 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다면, 동맹전이 이론은 세력전이 연구프로그램의 핵심가정이라 할 수 없는 동맹요인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연구프로그램에 속하는 진보된 이론이라 평가할 수 있다(DiCicco and Levy 2003, 135-137; 김우상 2007, 236-237).

Ⅲ.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변화

1. 북중동맹의 '재정상화'와 한미동맹의 변화발전

지배국과 도전국이 상호전략이란 맥락에서 기존 동맹을 유지 강화할 것이란 추론이 타당하다면, 미국이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반대로 중국은 북중동맹 및 중러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놀랄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위기 직후인 1996년 4월 정상간 공동성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문제에 대해 주요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대중국 견제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7년 9월 동북아 유사시 양국간 공동대처를 명시한 신 방위지침(defense guidelines)에 합의하고, 1998년 9월 미국 주도의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에 일본이 동의함으로써 대중국 견제 움직임이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2005년 2월 19일 미일 외무,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성명에 명시함으로써 탈냉전기 미일동맹 강화가 대중 전략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⁶⁾

한편, 중러 관계 역시 미일동맹에 대응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중러 양국은 1994년 장쩌민-엘친 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동반자(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를 수립하고, 1996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전략적(strategic)’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탈냉전기 양국관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비록 양국간 동반자관계가 제 3국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는 냉전기 동맹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NATO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대러,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한 중러간 접근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2000년 7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은 “제 3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타국의 안보이익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되며, 특히 대만을 미사일 방어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Goldstein 2005, 136-143).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북중 관계의 “재정상화(renormalization)”와 다소간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변화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상술한 미일동맹 및 중러관계의 발전과 동일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⁷⁾ 사실, 중북관계는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1999

5) 탈냉전기 초반 중국의 우려가 미일동맹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일본의 자체적 군비강화에 맞추어졌다면, 90년대 중후반 중국은 오히려 미일동맹의 강화로 인한 대중국 포위를 우려하고 있다(Christensen 2003, 32-35; Wu 2006, 119-130).

6) 중국은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人民日報 05/02/21, 4). 한편, 2006년에 발간된 미 국방부 “4개년 방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중국을 21세기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부상하는 국가’로 지목하고, 중국을 1) 보다 건설적 국가로 유도하거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중국이 위협적일 경우) 2) 기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공동 대응한다는 양면(hedging)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6, 29-32.

7) 북중관계의 “재정상화”란 개념은 Kim and Lee 2002, 114 참조.

년 4월 탕자쉬엔(唐家璇) 외교부장의 평양방문으로 양국관계가 호전되기 전까지 긴장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동 기간에 중국이 한국과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것에 비해 북한과의 최고위급 회담이 전무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북관계의 소원이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지하듯, 북한지역(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역대 중국지도부들의 '특이성(idiosyncrasy)'이나 국내정치적 상황에 상관없는 지정학적,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시기, 한국전쟁시기, 그리고 1993-4년 1차 북핵위기와 같은 역대 한반도 위기시에 중국지도부들은 공통적으로 '순망치한'의 논리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박홍서 2006, 106-107).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전략은 언제든지 적극적인 양태로 나타날 수가 있으며, 1999년의 적극적 관계 개선 노력은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1998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미일동맹의 강화 및 미사일 방어계획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99년 코소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의 중국대사관 오폭과 미 의회가 제기한 중국의 핵기술 절취 의혹 등은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1999년 4월 탕자쉬엔의 방북으로부터 2001년 9월 장쩌민의 방북까지 전개된 중국의 대북관계 회복 노력은 이러한 대미관계의 악화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Kim and Lee 2002, 112-117).

한편, 중국의 대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관계 개선 행보와 맞물리면서 보다 가속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핵 문제 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시도하고,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대미접근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곧 이어 울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 급진전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1) 북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2) 양국간 적대관계 청산, 미국의 대북경제 보장 및 경제지원, 3) 4자회담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의 전향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서보혁 2004, 285-288).

그러나, 스나이더(Snyder 1984)가 제시한 '동맹안보딜레마'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게 이러한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북한이 중국을 '방기'하고 오히려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그러한 부정적 상황전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합리적 동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물론, 중국 역시 북미간 관계 정

8)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08년 1월 30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은 절대로 중국을 배기(背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人民日報 08/01/31, 3).

상화를 명시적으로 지지하였으나, 그 배경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대외환경을 확보한다는 맥락이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한반도 지역의 전략적 이익은 행위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의 대한민국 세력확장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공동성명에 명시된 남북한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통일후 주한미군 잔류 가능'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사실 등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⁹⁾

특히,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으로 각각 촉발된 2,3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비록,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으나, 두 시기 모두 미국의 대북 무력제재에는 반대하였다. 즉,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통해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아울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역시 강조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던 것이다(Bandow 2006, 76-77). 예를 들어, 중국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자국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강경한 문제해결 방식에 반대하였다. 또한, 중국은 10월 14일 의심 물질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1718호)에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근거해 북한선박을 검색하거나 나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Kessler 2006). 결국, 중국은 북한으로 인한 미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만큼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편승함으로써 초래될 전략적 이익의 상실 역시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그 관리책으로 정치, 경제적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벼랑끝 외교와 미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차단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Kim 2006, 113; 박홍서 2006, 103-122).

한편, 북중동맹이 새롭게 정립되는 상황속에서 한미 동맹 역시 변화 발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중국에게 한반도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핵심적 목표중 하나라면, 탈냉전기 미국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자국의 패권유지에 '핵심지역(critical are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같은 잠재적 적대 국가의 세력팽창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본 및 한국 등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Department of Defense 2001; 이삼성 2003, 22-24).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대한민국 동맹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냉전기와 비교해 탈냉전기 한미 동맹은 상대적으로 갈등적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계획(MD)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9) 2005년 11월 당시 APEC 참석차 방한중이었던 후진타오는 국회연설에서 남북한간의 '자주적' 통일을 재차 강조하였다(연합뉴스 05/11/17). 김정일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You Ji 2001, 393-394 참조.

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유사시 미군의 대북 군사활동을 규정한 '작계 5029'에 대해 주권침해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이라든지, 미국내 일각에서는 동맹국 한국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동맹의 폐기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을 뒷받침한다(한겨레 05/04/15, 3; Feffer 2006, 185).

사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한국의 국력성장에 따라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동맹이론 중 '자율성-안보 교환' 모형에 따르면, 약소국이 강대국과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보를 획득하는 대신 자율성을 상실하는 상황이 가정되는데, 1953년 동맹체결 당시보다 한국의 국력이 증강하고, 이로 인해 미국에게 안보를 대가로 자율성을 양보하려는 동인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우상 2004, 12-13). 또한, 탈냉전기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간 역학관계 역시 한미간 갈등의 대외적 동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으로 대북 위협인식이 약화되면서, 한미동맹은 더 이상 냉전시기와 같이 명확한 '공동의 적'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2001년 부시행정부 취임 직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Armstrong 2006, 16).

그러나, 이러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폐기를 희망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패권 유지가 탈냉전기 핵심적 국가목표중 하나라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2003년 11월 부시행정부가 발표한 소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탈냉전시기에는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이 테러리즘과 같이 보다 소규모, 국지적 성격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을 그에 맞춰 보다 '기동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냉전기 해외주둔 미군이 동맹국의 안보만을 책임지는 고정군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 기타 지역의 분쟁시 신속 대응군의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umsfeld 2002, 20-32).¹⁰⁾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하고, 보다 거시적으로 한미동맹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2003,4년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을 통해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의 분담을 확장시키고, 한미동맹을 양자동맹에서 전세계적 "개입형 동맹네트워크"로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시켰다(이근 2005, 17-20).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용산기지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방기가

10) 소위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GPR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최종철 2006, 69-72).

능성을 감소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즉, 미국은 상술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용산기지의 이전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소위 '인계철선(tripwire)'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의 약화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카드는 역으로 한국의 동맹딜레마를 심화시켜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또한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북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 볼 수도 있다(Lee 2006, 257-261).

사실,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가 한국의 국가이익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들어, 한국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한국이 미군의 후방기지가 되는 부정적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극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현실적 이유가 없으며, 또한 현재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과의 향후 관계설정에도 있어서도 한미동맹을 건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문정인 2004, 26; 揚紅梅 2005, 25).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및 적극적인 한미FTA 체결 의지 등은 한미동맹 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미동맹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²⁾

2. 중국의 대한민국 '매력공세'와 북미관계의 반전?

중미 양국이 상호전략의 맥락에서 각각 기존 동맹국인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동맹국인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란 추론 역시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한민국 접근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및 최근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변화는 합리적인 상황전개라 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한국에게 자국으로의 편승을 요구하거나 혹은 경쟁국가로의 편승을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기 일본의 조선에 대한 편승요구 및 명의 대조선 직할통치론, 명청교체시기 청의 대조선 유화책 및 명의 조선 감호론이 그 예이며, 청일전쟁기에도 청은 조선의 대일 편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세개(遠世凱)를 파견해 강력한 대조선 개입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이다(한명기 1999, 34/61-67/236-237/266-272; 권혁수 2000, 197-269).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할

11) 2005년 3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사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아울러 '동북아 균형자론' 그리고 향후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경향신문 05/03/09, 3).

12)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2일 국회연설에서 이라크파병이 한미동맹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밝혔다(경향신문 03/04/03, 1).

수 없다. 사실, 중국은 한중수교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의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행태를 나타내었다. 한국이 주로 냉전의 약화 및 소멸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소위 '북방정책'을 통해 대중접근을 모색했다면, 중국은 천안문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중견제를 약화시키고 아울러 북미관계 정상화보다 앞서 한중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했던 것이다(Kim 2006a, 53/61; 서진영 2006, 404; 이동률 2002, 51).

주지하듯, 수교이후 한중관계는 정치, 군사안보 및 경제 영역 등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1992년 9월 노태우-장쩌민 정상회담 이후 2006년 11월 노무현-후진타오 정상회담까지 양국은 총 20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1998년 11월 '협력 동반자 관계'를, 그리고 2003년 7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같은 기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총 25차례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에 필적하는 한중정상회담의 개최 횟수는 수교 후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시사하기도 한다.¹³⁾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양국은 1999년 8월 조성태 국방장관과 2000년 1월 츠하오텐(遲浩田) 국방부장의 상호방문 이후 지속적인 고위급 군사교류를 해오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발전은 가장 주목할 만한데, 2004년 중국에게 한국은 홍콩을 제외했을 경우 미국, 일본에 이은 3대 교역국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으며, 아울러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 및 투자국이 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경제관계가 수치상으로 대미 경제관계를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양국간 인적, 문화 교류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유학하는 대상국이 되었다(서진영 2006, 383-392).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매력공세(charm offensive)'는 주목할 만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군사력 및 경제력과 같은 '경성권력(hard power)'을 통해 한국에게 자국의 희망사항을 '강요(command)'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문화, 가치 그리고 정책과 같은 소위 '연성권력(soft power)'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한국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인(attraction)'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⁴⁾

예를 들어, 중국은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시 위엔화 평가절하를 자제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추가적인 환율하락 압박을 일정정도 경감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소극적인 초기대응과 비교할 때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호의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Kurlantzick 2007, 35-36).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중국은 6자회담의 주도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입장과 거의 부합하는 것이기

13)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횟수 및 내용은 주미한국대사관, 2007, 한미관계 http://www.koreaembassyusa.org/bilateral/political/kor_index.asp?subgubun=3 (검색일: 2008.1.10) 참조.

14)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차이는 Nye 2004, 8 참조.

도 하였다(Kurlantzick 2007, 55/159).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대북 동맹딜레마의 관리 차원에서 수행된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미국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분쟁연루 방지)과 부합함으로써, 북핵문제해결자로서 중국의 위상이 한국내에서 제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6년 11월 17일 APEC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북미 양국이 보다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는데 동의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경향신문 06/11/18, 5). 이외에도, 한중 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에 있어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보다 긴밀해 지기도 하였다(Chung 2001, 792;李明 2005, 26).¹⁵⁾ 물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중간 갈등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북공정이 학술차원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행태는 한중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시사한다.¹⁶⁾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의 균열 조짐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상술한 '상대동맹의 균열 희망'이라는 이론적 논거로서 설명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각종 갈등들에 대한 중국 관영 언론들의 상세한 보도태도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 8일 공사출업식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의 동의 없는 주한미군의 동아시아 분쟁 참여 반대"에 대한 보도 이후 한미동맹상의 각종 이견들이 상세히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언론들은 한미동맹의 약화 원인으로 한국내 반미 정서의 확대, 한국의 국력 성장에 따른 자율성 확보, 그리고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한미간 이견 등을 거론하면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상반되는 한미동맹의 균열가능성에 주목하였던 것이다(徐宝康 2005; 王林昌 2005; 徐宝康 2006; 人民网 2006a).

특히, 중국은 한미동맹의 갈등요인이 대중국 전략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에 기인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통해 집단안보 체제를 주장함으로써, 냉전적 동맹구조를 지속하려는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문제를 핵심 관심사로 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반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王岬生 2006; 人民网 2005a). 물론, 이러한 한미동맹상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동맹관계를 향후 일정기간 지속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점차 약화될 것이라 기대 역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간 '공동선언'

15)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한중 양국의 접근은 환영할 만한 상황전개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7월 30일 미 의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결의안 통과를 일본을 억제해 한미일 동맹을 견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의안의 요지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사과, 그리고 향후세대에 대한 교육 등이다(경향신문 07/08/01, 2).

16) 2007년 4월 10일 노무현-원자바오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동북공정'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에 동의하였다(경향신문 07/04/11, 1). 한편,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문제 등 보다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절망(despair)'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Kim 2005, 148 참조.

을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한 견지에 합의하였는데, 중국 언론은 이를 한미간 전략적 필요성의 결과라고 분석하면서도 국제정치의 다극화 등으로 인해 향후 한미동맹의 모순 및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던 것이다(人民网 2006b; 人民网 2005b).¹⁷⁾

한편, 중국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해 암묵적인 희망을 보이고 있다면, 미국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및 북중동맹의 균열에 대해 보다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게 동북아 지역에서의 '현상유지'가 핵심적 국가목표 중 하나라면, '불량국가' 북한은 관계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세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 공화당 보수 세력과 부시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세력이 대북 포용정책을 '유화정책'으로 폄하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통해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기존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¹⁸⁾

또한, 미국은 대북 억지라는 측면에서도 북중동맹의 균열을 희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2005년 9월 졸릭(Zoellick 2005) 미 국무부 차관이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북중관계의 균열로 인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가 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대외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¹⁹⁾

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적 역학관계 및 북핵문제라는 상황적 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수행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10월 21일 북미기본합의서를 통해 향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명시하고, 이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기말까지 대북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및 금창리 핵시설 문제를 계기로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말 페리(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가 1999년 10월 제출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추후 대응에 따라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반대로 봉쇄정책으로 가야한다는 두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북미 양국은 2000년 10월 9일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10.23-25)함으로써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기 시작하였다(Lee 2006, 195-206).

한편, 2001년 1월 집권한 부시 행정부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완전히 단절된

17)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중관계의 악화가능성에 대해 중국언론이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한미동맹의 향방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뒷받침한다(人民网 2007a; 人民网 2007b; 人民网 2007c).

18) 1998년 9월 24일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인 Rohrabacher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제껏 들어본 가장 터무니(nonsensical) 없는 계획"이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Lee 2006, 195-196). 부시행정부의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의도는 Feffer 2006, 188-189 참조.

19)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이용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Armstrong 2006, 19/24 참조.

대북 강경정책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6월 6일 발표된 부시행정부의 대북 '포괄적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방안이 페리보고서와 유사하게 향후 북한의 행태에 따라 미국의 구체적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임을 표명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제적인 대테러 전쟁이라는 맥락속에서 강경하게 변화시키는 상황적 변수가 되었다. 9.11 직후 북한이 신속하게 테러리즘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으나,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행정부내 신보수주의 세력의 주도로 보다 강경하게 변화되었던 것이다. 2002년 1월 29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포괄적 접근에서 강경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단적으로 상징하였다 (Harnisch 2002, 868-871). 이후 북미관계는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11월 미국이 주도한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그리고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등으로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안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을 통한 국면 돌파가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다.²⁰⁾ 즉, 북중동맹 요인을 고려할 때, 북한은 자국의 강압외교를 통해 동맹국 중국의 연루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적극적인 중재로 4차에 걸친 6자 회담을 개최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후 불법 금융거래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이라는 벼랑끝 전술을 통해 동맹국 중국의 적극적 중재를 도모함으로써, 결국 2007년 2.13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전략카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¹⁾

주목할 만 한 점은 9.19 공동성명의 핵심이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것과 2.13합의 역시 9.19 공동성명의 적절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미 양국은 2007년 3월부터 관계 정상화 회의를 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2008년 말 이전이라도 북미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매우 신속한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버시바우 2007) 사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의 급속한 변화는 이라크 전쟁으로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한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9.11 이전의 양상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특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정권의 성격(민주당, 공화당)이나 상황적 변수(이라크 전쟁)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수행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Zacharia 2007).

20) 탈냉전기 북한의 핵심적 대외목표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체제안정이다(서보혁 2004, 125-129).

21) 북한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중북동맹이 비대칭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의 벼랑끝 외교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시각은 Han 2004, 169-171 참조.

이와 같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탈냉전기 대전략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를 침해하는 북한을 방어적인 입장에서 억제하거나,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북한을 유인 혹은 정권교체를 통해 대중 견제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내 일각에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에 대해 북한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대중 봉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Feffer 2006, 189; 해리슨 2004, 494-495). 또한, 장기적인 대중전략의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후 주한미군을 존속시키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유지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미국내 일반적 시각 역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이 그 사전 정치 작업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Cha 외 2003, 168-177; O'hanlon 외 2003, 145-165; Mitchell 2003, 123-137).

IV. 결론

탈냉전기 중미 양국은 상호 전략적 맥락에서 각각 남북한과의 관계를 변화, 발전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1999년 관계 재정상화를 통해 복원시켰으며, 한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및 경제 영역 등 전부분에 걸쳐 급속한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미간 각종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변화 강화시키고 있으며, 9.11 직후 추구된 대북 강경책을 제외하면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는 비교적 일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정책의 변화는 '동맹전이'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배국가의 동맹세력과 도전국가의 동맹세력간 힘이 엇비슷해질 때 양측간의 분쟁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면, 지배국가나 도전국가 모두 기존동맹을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아울러 상대진영의 동맹국을 '유인'하려는 전략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중국이 북중동맹을 견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접근하려는 것이나, 반대로 미국이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서 중국의 혈맹인 북한을 유인하려는 것은 향후 미중 상호간 관계 설정에 있어서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미 양국의 현실주의적 행태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력전이 이론이 세력균형이론과 달리 국가들의 '만족도' 여부를 핵심적 변인으로 가정하고 있다면, 중미 상호간 만족도 수준이 향후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의 구체적 양상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전국으로 가정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미국 역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현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시켜 '책임 있는 국가'로 변화시킬 의도가 있는가? 만약, 중미 양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간 상호 전략 역시 보다 유연해 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중미관계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다. 즉, 양국은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행태를 보여 오고 있는데, 이는 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화평굴기’를 내세워 발전 과정에 있어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이에 미국은 중국을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갖는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Goldstein 2005; Zoellick 2005; Drexner 2007; 박홍서 2007). 비록, 이러한 중미 상호간 호혜적인 만족감이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전략적 인식이란 측면이 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국간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²²⁾

결국 이와 같다면, 중국의 대한국 접근이나 미국의 대북 접근이 근시일내에 ‘노골적인’ 상호 견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중미 양자간 세력격차가 좁혀지고 세력전이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중미 양국의 상호간 만족도가 현재 수준과 유사할 지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속에서 중미간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적절한 ‘이익균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을 유인하거나 자국으로의 편승을 강요해 상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미 양국의 행태가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22) 존스톤(Johnston 2003)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제도 및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상유지(status quo)’적 성격은 전략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보다 관념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중미간 분쟁가능성은 양국간 세력관계의 단순한 변화보다는 중국내 정치적 불안정이나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같은 상황적 변수로 증폭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혁수. 2000. 『19세기말 한중 관계사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 김우상. 2004. “한미동맹의 이론적 재고.” 『한국과 국제정치』. 20권 1호 (봄). 1-28.
- 김우상. 2007. 『신한국책략 II』. 서울: 나남.
- 문정인. 2004. “중국편승론의 함정.” 『한국일보』 (05/12). 26.
- 버시바우. 2007. “주한미대사 인터뷰: 북미관계 정상화-한반도 평화체제 동시에 가능.”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view/at_pg.aspx?cntn_cd=A0000704999 (검색일: 2007.12.31)
- 박홍서. 2006.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중미관계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6집 1호. 103-122.
- 박홍서. 2007.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국제정치논총』. 47집 3호. 77-97.
- 서보혁. 2004.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서울: 폴리테리아. 『선조실록』.
- 셀리그 해리슨 씀. 2004. 이홍동 외 옮김. 『코리아 엔드게임』. 서울: 삼인.
- 이근. 2005.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한미동맹의 미래.” 『국가전략』. 11권 2호. 5-27.
- 이동률. 2002. “수교이후 한중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소연구』. 통권 95호. 43-65.
- 이삼성. 2003.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9권 3호. 7-38.
- 주미한국대사관. 2008. 한미관계.
http://www.koreaembassyusa.org/bilateral/political/kor_index.asp?subgubun=3
(검색일: 2007.12.31)
- 최종철. 2006.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구상.” 『국가전략』. 12권 1호. 59-99.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 『경향신문』 03/04/03. 1; 05/03/09. 3; 06/11/18. 5; 07/04/11. 1; 07/08/01. 2.
- 『연합뉴스』 05/11/17. 『한겨레』 05/04/15. 3.
- Armstrong, Charles K. 2006. “US-North Korean Relations.” in John Feffer, ed. *Th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9-28. New York: Routledge.
- Bandow, Daug. 2006. “Enlisting China to Stop a Nuclear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8:4 (Winter). 73-93.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07. World Fact Book 2007.
<https://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ch.html> (검색일: 2007.6.15)

-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Thomas J. 2003.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25-5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ristensen, Thomas J. 2006. "Fostering Stability or Creating a Monster?: The Rise of China and U.S. Policy toward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1:1 (Summer). 81-126.
- Chung, Jae Ho. 2001. "South Korea between Eagle and Dragon: Perceptual Ambivalence and Strategic Dilemma." *Asian Survey*. 41:5 (Sep./Oct.). 777-796.
- Department of Defense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Posture(QDR).
<http://www.defenselink.mil/qdr> (검색일: 2007.12.31)
- Department of Defens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Posture(QDR).
<http://www.defenselink.mil/qdr> (검색일: 2007.12.31)
- DiCicco, Jonathan M. and Jack S. Levy. 2003.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 Lakatosian Analysis." in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Progr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ppraising the Field*. 109-158. Cambridge: MIT Press.
- Drexner, Daniel W. 2007. "The New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86:2 (March/April). 34-46.
- Feffer, John. 2006. "Grave threat and grand bargains: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 John Feffer, ed. *Th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178-199. New York: Routledge.
- Friedberg, Aaron L. 2005.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30:2 (Fall). 7-45.
- Goldstein, Avery. 2005.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 Sukhee. 2004. "Alliance Fatigue amid Asymmetrical Interdependence: Sino-North Korean Alliance in Flux."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6:1 (Spring). 155-179.
- Harnisch, Sebastian. 2002. "U.S.-North Korean Relations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From "Slow Go" to "No Go." *Asian Survey*. 42:6 (Nov.-Dec.). 856-882.
- Johnston, Alastair I. 2003.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27:4 (Spring). 5-56.
- Kessler, Glenn. 2006. "U.S. Officials Call On China to Help Enforce U.N. Resolution on N. Korea."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6). A15.
- Kim, Samuel S. 2006a. *The Two Koreas and the Great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Samuel S. 2006b. "China's new role in the US-DPRK nuclear confrontation." in John Feffer, ed. *The Future of US-Korean Relations*. 101-129. New York: Routledge.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2002. "China-North Korean Relations: Managing Asymmetrical

- Interdependence.” in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n and Northeast Asia*. 109-138.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Kim, Taeho. 2005. “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Looming Tensions amid Growing Interdepende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7:1 (Spring). 129-149.
- Kim, Woosang. 1992. “Power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from Westphalia to Waterloo.” *World Politics*. 45:1 (October). 153-172.
- Kurlantzick, Joshua. 2007.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katos, Imre. 1970.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91-1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ae-Jin. 2006.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chael O’hanlon and Mike Mochizuki. 2003.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New York: McGraw-Hill.
- Mitchell, Derek Jr. 2003.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26:1 (Winter). 123-137.
-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rganski, A.F.K. 1958.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pper, Karl R. 1961.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Science Editions, Inc.
- Rumsfeld, Donald H. 2002.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81:3 (May/June).
- Schweller, Randall L. 2006. *Unanswer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7. Data on military expenditure.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data_index.html (검색일: 2007.12.31)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461-495.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Wu, Xinbo. 2006. “The End of the Silver Lining: A Chinese View of the U.S.-Japanese Alliance.” *The Washington Quarterly*. 29:1 (Winter). 119-130.
- You, Ji.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28. 387-398.
- Zacharia, Janine. 2007. “Bush Uses Clinton’s Approach to Secure Korean Accord,”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b9JMOlf9310&refer=home> (검색일: 2007.12.31)

Zoel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http://usinfo.state.gov/eap/Archive/2005/Sep/22-290478.html> (검색일: 2007.12.31)

李明. 2005. "中國大陸和平發展与朝鮮半島形勢." 『現代國際關係』. 第12期. 23-28.

人民网. 2005a. "周邊國家不盲從 美國圍中國的圖謀將落空."

<http://world.people.com.cn/GB?14549/3269355.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5b. "國際觀察：韓美同盟關係出現新調整."

<http://world.people.com.cn/GB/14549/3870227.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6a. "韓美軍隊決定指揮部分家韓美同盟走向瓦解."

<http://military.people.com.cn/GB/42969/4675687.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6b. "韓美軍事同盟：調整但非解 ."

<http://news.people.com.cn/GB/71648/71652/4874239.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7a. "韓國新總統外交向"右"轉."

<http://world.people.com.cn/GB/1029/42354/6686145.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7b. "美日對李明博寄予厚望."

<http://world.people.com.cn/GB/1029/42354/6681077.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网. 2007c. "韓國總統候選人李明博澄清"強韓抗華"的專聞."

<http://world.people.com.cn/GB/1029/42354/6667258.html> (검색일: 2007.12.31)

『人民日報』. 2005. "堅決反對美日發表涉及台灣問題的共同聲明." (02/21). 4.

『人民日報』. 2008. "金正日會見王家瑞." (01/31). 3.

王林昌. 2005. "韓美同盟?向弱化."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GB/1030/3297835.html> (검색일: 2007.12.31)

王嶠生. 2006. "軍事述評：韓美同盟四大致命傷." 人民网.

<http://military.people.com.cn/GB/42969/58520/4807099.html> (검색일: 2007.12.31)

溫憲. 2007. "朝鮮半島和平：中國的作用不容忽視."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GB/57507/6357208.html> (검색일: 2007.12.31)

徐宝康. 2005. "盧武鉉向美國說"不" 韓不讓美軍?和東北亞."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GB/14549/3240944.html> (검색일: 2007.12.31)

徐宝康. 2006. "韓美軍事同盟快破裂了." 人民网.

<http://world.people.com.cn/GB/14549/4647114.html> (검색일: 2007.12.31)

揚紅梅. 2005. "美韓同盟調整動力，現代与前景." 『現代國際關係』. 第8期. 20-25/45.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sj/qtsj/gjsj/2006/> (검색일: 2007.12.31)

A Research on the ROK-U.S. Transformation of Alliance led by South Korea

Han Sukhee & Ha Hyun-yong

The major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test the significant variables to transform the ROK-U.S. alliance led by South Korea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between nation's alliance policy settlement and various alliance's transformation causes by the utility expectation theory. As a result,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North Korea's cooperativ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conflict behavior toward South Korea are the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ROK-U.S. alliance led by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tivations of the alliance transformation include the changes of mutual threat percep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U.S., and South Korea's perceived deterioration of autonomy in asymmetric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the ROK-U.S. alliance must be understood more clearly with the dynamic perspective than with the typical asymmetric alliance perspective. And the scope and the direction of the ROK-U.S. transformation of alliance are influenced by the threat perceptions and the alliance interests shared between South Korea and U.S.

Key Words: asymmetric alliance, the ROK-U.S. alliance, alliance's transformation, expected utility theory, empirical test

Wooing the foe's partner?: U.S. and China's alliance strategies towards two Koreas in their power transition

Hongseo Park

Why has China affirmatively approached South Korea since the normalization in 1992? On the other hand, why has U.S. exposed its intention for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 despite the latter's brinkmanship diplomacy? As a possible answer fo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U.S. and China have respectively made up their Korea policy in a long-term mutual strategic consideration. Put simply, in response to emerging China, U.S. has not only built up its existing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but also kept consistent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shown

in a series of US-DPRK agreements on the North's nuclear issue in 1994, 2005, and 2007. By contrast, in defiance of Washington's encircling strategy against China, Beijing has restore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Pyongyang since 1999 and affirmatively approached South Korea ever since the PRC-ROK normalization in 1992.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lliance transition model whose proposi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iance relations when power transition takes place between dominant state and challenger. In the theoretical respect, accordingly, it would be logical for U.S. and China to not only keep up their existing alliance but also attract the other's ally for more advantageous strategic position in their power rivalry.

Key Words: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The Korean peninsula, Two Koreas, Alliance transition theory

ASEAN's Balanced Strategy toward Power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Pivotal Role of the Weak States

Kim, Yei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SEAN's correspondence strategy toward power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Recently, ASEAN region has become not only a game ground for US and China, but also a buffer zone where the potential collision from this competition has been prevented. ASEAN's strategic value has been increased, and ASEAN still plays a pivotal role, even though composed of weak states. Taking advantage of conflicts between US and China, ASEAN has secured international status. In the "balanced strategy", ASEAN does not aim at countering or alienating any one of the two states, but focuses on securing benefits and interests derived from that particular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

Key Words: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ASEAN, Balanced Strategy, Weak States, Pivotal Role